

① 어선원 직불제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팀장 강희정 사무관 박순형 주무관 박민아	044-200-5421 044-200-6011 044-200-5454

I. 사업개요

1. 목 적

- 연근해어업 인력자원으로 수산업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해 직불금 지원을 통한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

2. 근거 법령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의 시행)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며 생산기반을 가지지 못한 어선원의 소득안정 도모와 공익기능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활성화

성과지표	2023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 어선원 직불금 지급 비율	00%	-	-	-	-	익년도 1월말	(직불금 지급 어선원 / 직불금 신청 어선원)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8,000	18,000	18,000	18,000
- 국 비	18,000	18,000	18,000	18,00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 연근해어업허가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2. 신청 자격 및 요건, 제외대상

- ☐ 신청 자격 및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수산업법」 제18조의4에 따른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어선원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 산정기간 : '22.1.1. ~ '22.12.31.(1년) 또는 '22.4.1. ~ '23.3.31.(1년) 동안 6개월 이상 고용계약 또는 6개월 이상 승선기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혹은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 각 호* 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한다.

*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가족어선원>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어선의 소유자>

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명칭에 상관 없이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기가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자

-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천만원) 미만일 것
-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500만원) 미만일 것

□ 지급 제외 대상

- 「수산직불제법」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업법」 등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남시 관리 및 육성법」, 「내수면어업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소금산업진흥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중장산업육성법」, 「식품신품종 보호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어선안전조업법」, 「어업자원보호법」, 「어장관리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수산직불제법」 제19조 및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법 제1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4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같은 항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 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같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규모어가가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 가. 소규모어가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일일 어획량 또는 양식업의 생산량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할 것
- 나. 소규모어가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실적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할 것
-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 조치를 준수할 것
- 라.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어선원의 활동을 유지하지 않거나 신청자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23.1.1.부터~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①어선원으로 승선 입·출항 기록이 1회 이상 있거나 ②어선원 고용계약 체결 사항이 있는 경우 어선원 유지 인정. 다만, 입·출항 기록의 경우 본인 소유 어선 승선 또는 어선의 소유자로 승선하는 경우 제외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및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지급 제한:**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해당하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0.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 가.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 나.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 다.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9.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 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 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제20조(제한기준)

법 제13조제5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표 2]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지급제한을 받은 자가 지급신청연도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지급제한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가중할 수 있고,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지급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다. 법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3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4항		
1)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2) 운영위원회가 어촌마을공동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1차 경고	
		2차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1년
		3차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3년
마.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해당 양식면적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아.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자.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차. 법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6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7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1)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3)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법 제21조 제1항제 8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파.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법	법 제21조 제1항제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 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9호		
---	----	--	--

3. 직불금 신청 및 지급대상자 선정

□ 직불금 신청

- 어선원 직불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어선원은 어선(근로계약 어선 또는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어선)의 선적항이 있는 읍·면·동장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제출
 - * 읍·면·동장은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자격유무와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세대 단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어가)를 대표하여 어선원 직불금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이 대표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은 불가
- 어선원이 조업 등으로 직불금 신청이 불가할 경우, 어선소유자 또는 세대 구성원 등이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지급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대상자로 선정
- 선정 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장과 직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에게 통지하며,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직접지불금으로서 제한사항 없음

5. 지원형태 및 지원금액

- 재 원(지원율)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국고 100%)
- 지원금액 : (직불금) 어선원 당 연간 120만 원, (행정비) 직불금의 1.7%
 - * 행정비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자체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210목, 220목 및 보조인력 채용 등에 사용가능하며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용도 사용 금지(집행 관련 서류 5년간 보관)

6. 지급 방법 및 시기

☐ 지급 방법

-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어선원의 준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신청자(본인) 계좌로 입금

☐ 지급 시기

- 준수 의무 이행여부 확인 및 기타 행정절차 완료 시점부터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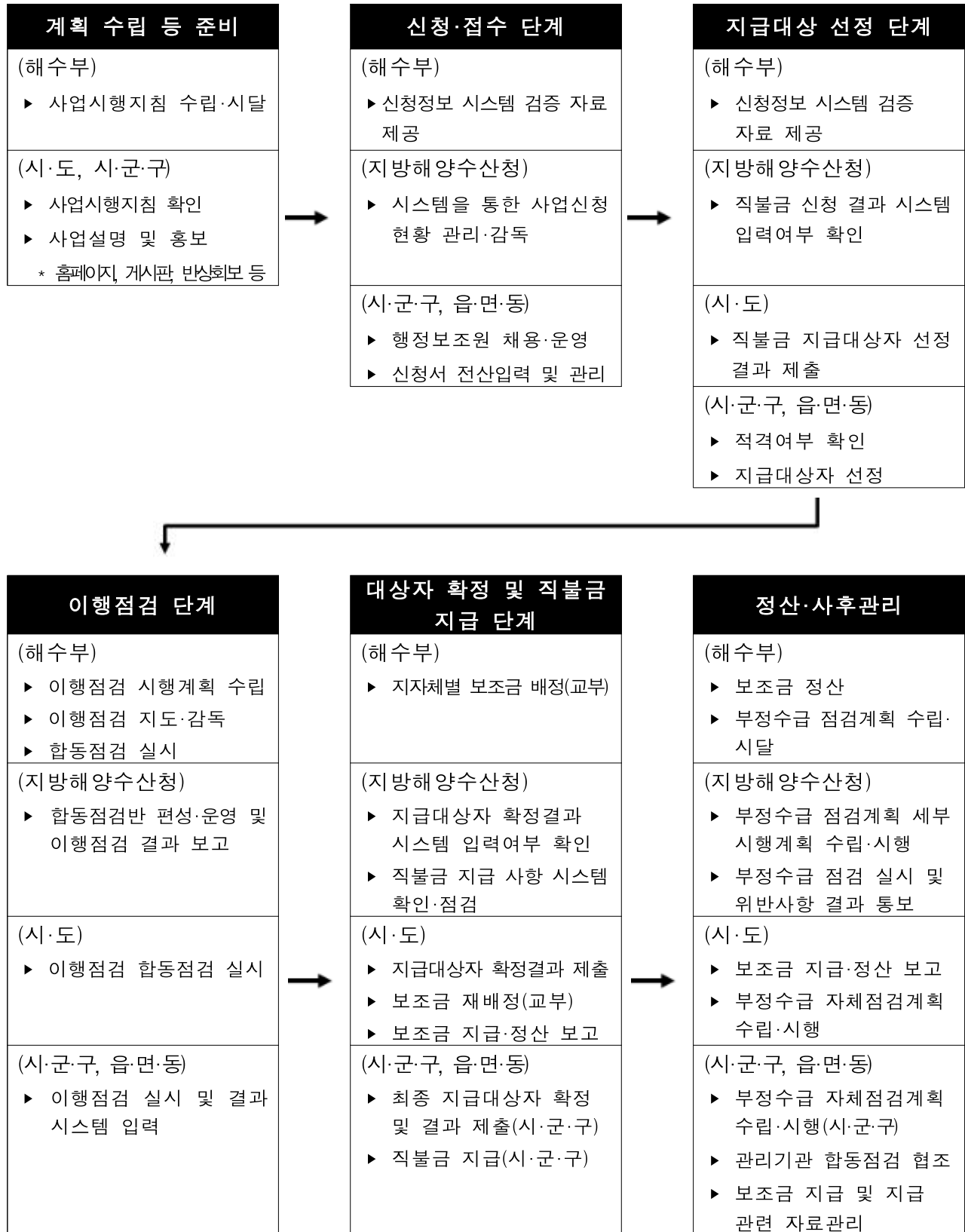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일정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사업추진 절차



1. 계획 수립 등 준비단계

해양수산부

-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도, 지방해양수산청에 시달(3월)

시·도, 시·군·구

* 신청수요 사전조사는 '23년의 경우 미 실시

- ☐ (시·도) 신청수요 사전조사 추진 등 세부사업계획 수립(4월)

- 시·군·구별 직불금 지급 신청수요 사전조사 및 홍보계획 등 수립·시행

- ☐ (시·군·구, 읍·면·동) 신청수요 사전조사 협조 및 사업 홍보 추진(~4월)

- 시·군·구 등의 홈페이지, 신문, 생활정보지, 반상회보, 시·군·구 홍보지 등에 공고·게재하는 등 홍보

▶ 공고에 포함할 내용

- ① 어선원 직불금 신청의 자격, 신청 제외 대상자,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요건, 지원금액, 지급제한,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최대 5배 환수, 가산금 부과 및 벌칙에 관한 사항
- ③ 그 밖에 어선원 직불금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읍·면·동장은 사업대상지역 허가어선의 소유주(선주) 및 어선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사전 홍보, 직불금 신청서 사전배부 및 작성 방법 등 안내
- 읍·면·동장은 수협, 허가어선의 소유주(선주) 및 어선원 관련 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4.24.) → 시장·군수·구청장은 검토·취합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4.28.) → 시·도지사는 검토·취합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게 제출(~5.3.)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검토·취합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5.10.)

2. 신청·접수 단계

어선원

-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선원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와 구비서류를 본인이 승선·근로를 제공하는 어선의 선적항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4.1.~5.31.)

- 전산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신청인이 이를 동의한 경우 해당 증명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 ① 별지 제12호의7서식에 따른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 승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신청인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 시,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고 등록신청인이 이를 동의한 경우 해당 증명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하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첨부
 -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 4. 선박출항·입항 신고사실확인서, 5.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 7. 어선등록필증, 8. 어선 입항·출항정보, 9.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0. 어업면허증, 1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2. 임금계좌확인정보, 13. 주민등록표 등·초본, 1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읍·면·동

-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 받은 읍·면·동장은 신청정보를 직불제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함)에 입력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간 시스템 검증 결과 등을 통해 신청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 및 가구 구성원과 주민등록표상 신청인 및 가구 구성원 적정 여부
 - * 가족관계증명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
- 신청인이 제출한 고용계약서 등 제출자료를 확인 및 적격여부 검증
 - ① 어선원 승선 어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 여부(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등)
 - *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항제1호
 - ② 산정기간* 내 6개월 이상 고용계약(고용계약서) 또는 6개월 이상 승선기록(전산시스템 어선원 입·출항 기록) 여부
 - * 산정기간 : ‘22.1.1. ~ ‘22.12.31.(1년) 또는 ‘22.4.1. ~ ‘23.3.31.(1년) 동안 6개월 이상 고용계약 또는 6개월 이상 승선기록
 - ③ 신청인 세대 내 중복 신청 여부
 -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필요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 ④ 그 밖의 직불금 신청자격과 관련한 사항 등

- 읍·면·동장은 직불금을 신청한 신청인의 자격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 제출자료)를 검토·보관

- 기관간 검증시스템 검증 주기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에 대한 자격요건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최종 제출 전까지 주기적 재확인
 - * 정보연계 결과 정보의 확인·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보 재확인 후 시스템 입력→ 연계 점검 결과 확인(미수정시 다음단계 점검 불가능)
 - ** 주민등록정보는 기본정보로 잘못 기입 시 부정확한 결과 도출 / 정보연계 결과에 따라 변경 정보 주기적 확인
- 어선원 직불금 신청서를 제출한 어선원에게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안내
 - 신청서 제출에 따라 신청정보 등에 대한 자격요건과 지급요건 등의 점검 이후 적격 시 직불금 지급
 - 직불금 지급절차(지급 대상자 선정 → 이행점검 → 지급 대상자 확정 → 직불금 지급) 안내
- 전산시스템으로 지급요건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요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보완 요청
- 신청정보 재확인 및 이의신청 처리
- 직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지급요건 증빙자료 등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보관(5년간)하여야 함

시·군·구

☐ 보조원 등 채용(시·군·구, 읍·면·동)

- 사업신청 및 접수를 위한 전산입력 보조원 등 채용 지원
 - * 보조원 채용 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신청서 신청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 현황 관리·감독(시·군·구)

- 읍·면·동의 사업 신청 및 접수 단계에 대한 전산시스템 관리·감독
 - * 직불금 신청 결과 제출시까지 전산시스템 등록사항 모니터링 및 신청 저조 지역 홍보 추진 등

시·도

☐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 현황 관리·감독

- 시·군·구의 사업신청 및 접수단계에 대한 전산시스템 관리·감독
 - * 직불금 신청 결과 제출시까지 전산시스템 등록 사항 모니터링 및 신청 저조 지역 홍보 추진 등

지방해양수산청

□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업 신청 현황 관리·감독

○ 관할 시·군·구의 사업 신청 및 접수 단계에 대한 전산시스템 관리·감독

* 지역별 시청·접수 전산시스템 등록사항 모니터링 및 신청 저조 지역 홍보 협조 등

▶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 관련 업무

- (신청 어선원) 직불제 자격요건 검증용 증빙서류 준비, 등록신청 방법 및 준수사항, 교육 이수 등에 대한 숙지
 - 어선원 직불제 신청 전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승선 고용계약서 등 사전준비
- (읍·면·동) 어선원 직불제 신청·접수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허가어선 소유자 단체 또는 어선원 단체 등과 협업하여 업무처리
 - 읍·면·동 직불제 담당자는 사업시행지침 및 시스템 운용 방법을 숙지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신청접수 계획을 수립
 -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령의 어선원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불담당자 및 전산입력보조원을 대상으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보관
 - 담당자는 사전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누락, 행정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 접수, 이관, 전산입력, 자격요건 확인 등 관련 업무를 숙지
- (시·도, 시·군·구) 관련 기관(읍·면·동, 지방해양수산청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운영관리계획 수립
 - 시·도, 시·군·구 담당자는 원활한 직불제 관리를 위하여 읍·면·동 업무담당자 자체 교육 및 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지방해양수산청) 업무담당자 교육, 어선원 대상 홍보 및 준수사항 이행 독려 등

3. 지급대상자 선정 단계

읍·면·동

□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등 자료를 재검토하고 전산시스템 등록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제공 자격요건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8서식] (어선원 직접직불금 지급대상 확인서)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6.9.)

- 신청서류 검토사항 : 기재사항 누락 여부, 구비서류와의 일치 여부, 신청자의 자격 요건 적합 여부 등 검토

시·군·구

- ☐ 읍·면·동장이 제출한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취합하고 신청인에 대한 전산시스템 등록사항 일치 등 지급요건 적격여부 재검토
- ☐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읍·면·동장에게 알리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8서식]으로 시·도지사에게 제출(~6.16.)
 -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알려야 함. 다만, 신청인 이의신청에 의한 조치 등에 따라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알리고 기간 조정(민원처리기간 연장에 준한 조치)
 -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는 읍·면·동장에게 알리고 신청인에게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9서식](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10서식](지급대상자 제외 통보서)으로 알려야 함(~6.23.)
 -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준수사항 이행 여부, 조사 협조의무, 부정수급 시 제재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미리 알려야 함

시·도

- ☐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전산시스템 입력사항을 취합·검토하여 [지침 별지 제3호서식]으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6.28.)

지방해양수산청

- ☐ 시·도지사가 제출한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 전산시스템의 입력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지침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6.30.)

4. 지급요건 이행점검 및 확정단계

가. 지급요건 이행점검

해양수산부

- 지급요건 이행점검과 관련한 관계기관 연계정보(종합소득세 정보 등) 등을 이행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통해 주기적 등록 제공
- 지급요건 이행점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해양수산청 및 시·도지사에게 전달

지방해양수산청

- 공익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수산직불제법」 제20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지도·감독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고 이행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전산시스템에서 사업추진 절차(사업자선정, 확정단계, 지급 등)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행 상황에 대한 단계별 관리

시·도

- 시장·군수·구청장의 이행점검 상황을 지도·점검하고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이행점검이 완료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완료 보고(~11.17.)
 -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체 이행점검계획 수립·시행 사항과 관리기관 합동점검 협조 등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급대상 선정자에 대해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점검 실시(7.3.~10.31.)
 - 지급요건 이행점검은 전산시스템(행정정보공통이용시스템, 관계기관 연계 정보, 해양수산부 제공 정보 등)을 통해 점검하고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및 지급대상 실제 근로 여부 등 현장확인 필요 사항은 현장점검 병행 실시
 - 지급요건 이행점검 시 어선원 직접지불제 자격요건과 지급요건의 적격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급요건 등을 위반하거나 자격이 적격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시·도지사와 읍·면·동장에게 알려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점검 추진계획 수립 시 지방해양수산청과 계획을 공유하고 지방해양수산청의 지급요건 이행점검에 협조·지원
 - 읍·면·동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변경대상자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 등 지급대상자 선정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변경대상자에 대한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읍·면·동장에게 알리며, 변경대상자에게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9서식](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10서식](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으로 알려야 함

- 신청자의 수산관계법령 위반 여부는 서울행정시스템과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확인된 위반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지급대상자의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점검 실시

- 점검결과 지급요건 이행여부는 ‘이행’과 ‘불이행’으로 구분 / 불이행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시

○ 지급대상자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사항

- (신청·지급요건)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신청정보와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요건검증정보를 활용하여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신청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급요건 적격 여부 확인
*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관계기관 연계정보 등 검증정보를 활용하여 적격 여부 확인

- ① 신청인 및 신청인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
- ② 신청인 및 신청인 가구원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
- ③ 신청인 및 신청인 가구원의 신청년도 직전년도 농업공익직접지불금, 임업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
- ④ 그 밖에 신청자격과 지급요건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어선원 유지)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어선원 유지 여부
* '23.1.1.부터~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어선원으로 승선 입·출항 기록이 1회 이상 있거나 어선원 고용계약 체결 사항이 있는 경우 어선원 유지 인정. 다만, 입·출항 기록의 경우 본인 소유 어선 승선 또는 어선의 소유자로 승선하는 경우 제외
- (공익기능 교육 이수 및 그 밖의 준수사항) 「수산직불제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수산직불제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수산관계법령 위반여부, 「수산직불제법」 제19조제3호 이행여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별표 7] 이행여부
- (전산시스템 검증결과) 전산시스템 검증 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점검을 완료하고 이행점검 결과를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시·도지사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10.31.)

읍·면·동

- 지방해양수산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지급요건 이행점검을 협조·지원하고 이행점검 결과 지급대상 제외(지급요건 위반, 자격이 적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상에 대한 사유 확인·점검 및 지급대상 제외 알림 조치
- 지급요건 이행점검 중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세대 구성원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요건과 지급요건에 적격한 어선원으로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자를 변경할 수 있음

-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자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음

<직불금 지급대상자 변경 업무 절차>	
○ (어업인)	신청인의 사망 등 불가피하게 직불금 지급대상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어가 내 어선원 직불제 신청요건 및 지급요건에 적격한 사람이 읍·면·동장에게 사유서와 함께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읍·면·동)	지급대상자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신청인의 직불금 지급요건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8서식]으로 보고
○ (시·군·구)	읍·면·동으로부터 지급대상자 변경신청 보고가 있는 경우, 변경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읍·면·동장 및 변경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적격 시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9서식]으로 통지하고 변경 부적격 시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10서식]으로 통보 - 변경 결정 시 신청요건 및 지급요건 등을 최종 확인 - 변경 대상자는 당초 선정된 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변경대상자)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세대 구성원 중 어선원 직불금 신청요건 및 지급요건에 적격한 어선원이 변경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변경신청대상자가 없을 경우 사망한 지급대상의 일반 상속인에게 직불금 지급 불가	

나. 지급요건 이행여부 판정 및 확정

읍·면·동

- 지방해양수산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지급요건 이행점검에 협조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지급요건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전산시스템 등록 지원
- 이행점검 결과 지급요건에 적격하지 않은 지급대상자는 전산시스템에 부적격 처리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최종 판정하고, 지급요건에 적격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최종 입력한 후 [지침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시·도에 보고(~11.10.)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지급대상자 확정결과를 검토하고 [지침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해양수산부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 보고(~11.17.)

지방해양수산청

- 지급대상자 확정결과와 전산시스템 등을 교차확인하여 전산시스템 미점검 사항 등 미비점에 대해 시·도에 통보하고 조치 요청(11.1.~11.17.)

5. 자금배정 및 직불금 지급 단계

해양수산부

가. 자금배정 및 교부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어선원직불금 사전수요조사 등을 감안하여 세출예산 배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직불금 및 행정비를 시·도에 배정(~7.21.)
 - 행정비는 직불금의 1.7% 내외로 배정 가능
 - * 행정비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자체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210목과 220목으로 사용가능하며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용도 사용 금지(집행 관련 서류 5년간 보관)
-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어선원 직접지불금 선정결과 및 직불금 지급 대상자 확정결과를 감안하여 직불금 및 행정비를 시·군·구에 배정

나. 직불금 지급 및 수령자 정보공개

- 시장·군수·구청장은 직불금 지급 선정자의 지급 제한사항 등을 최종 확인·반영하여 어선원에게 직불금 지급
 - 직불금 지급은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에 입금 처리/본인 수령이 원칙
 - * 신용불량자 등 불가피하게 본인계좌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수령자를 위임할 수 있음
- 시·도지사등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를 공개
 - 정보 공개 방법
 - 공개 내용 : 어선원의 성명, 직불금의 종류, 수령액
 - 공개 기간 : 직불금 지급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
 - 공개 방법 : 시·군·구의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의 게시판 게시
 - 공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에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
 - * 이의신청을 받은 대상자의 관할 읍·면·동에서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직불금 수급 대상자에게 통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6. 대상자 관리 및 제재 등

가. 대상자 관리

-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직불금 지급요건, 자격유무 및 적격 여부 등 대상자 검증을 철저히 하고 직불금 지급과 사후관리 시점까지 관리

나. 제재

- ①지급요건 불이행시,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수산직불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처벌 등 조치

<환수·제재부가금·벌칙 등>

○ 부당이득금 환수(수산직불제법 제22조제1항)

- 수산직불제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부당이득금)을 즉시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제18조의5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됨)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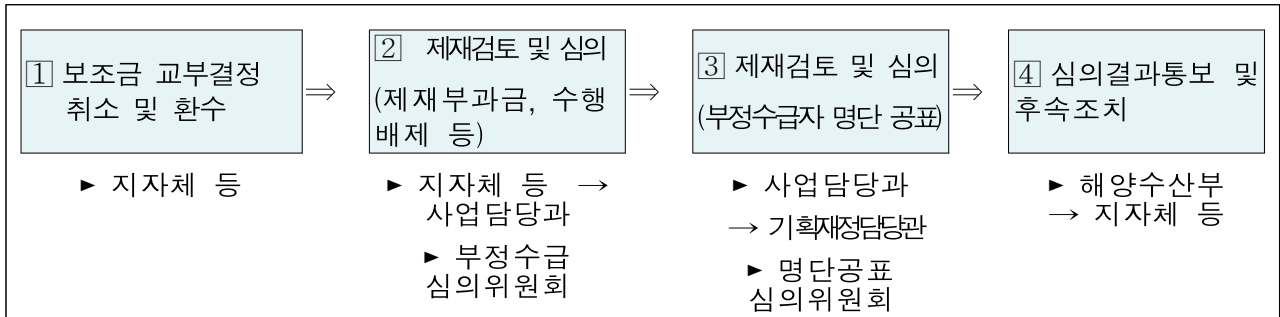
○ 제재부가금의 부과(수산직불제법 제22조제2항)

- 수산직불제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금액(제재부가금)을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음

○ 벌칙(수산직불제법 제30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부정수급자 제재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 허위신청 등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추진
 - 「수산직불제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제재부과금 대상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제재부과금 대상을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재검토 요청
- 해양수산부는 제재검토 요청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 후 보조금 부정수급심의 위원회 개최·심의 결과 통보
-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재대상자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고 제재부가금 고지서 발급 및 징수 추진
 - 제재대상자에게 심의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함을 안내

7. 사후 관리

해양수산부

- ☐ 지급요건 이행점검과 관련한 관계기관 연계정보(종합소득세 정보 등) 등을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통해 주기적 등록 제공
- 사후관리 점검계획 수립하여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 점검계획 시달

지방해양수산청

- ☐ 사후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 추진
 -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서면 또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사례 적발 시 그 결과를 [지침 별지 제7호서식](어선원 직접지불금 사후관리 결과보고)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와 해양수산부에 제출

시·도

-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사후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시·군·구청장의 국고보조금(행정비) 집행내역 및 부정수급 자체점검 등 사후관리 지도·감독
 - 시장·군수·구청장의 부정수급 사후관리에서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를 취합하고 그 결과를 [지침 별지 제7호서식](어선원 직접지불금 사후관리 결과보고)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해양수산부에 제출

시·군·구

- 부정수급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사례 적발 시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며 [지침 별지 제7호서식](어선원 직접지불금 사후관리 결과보고)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
 - 부정수급 대상자 최종 확인 및 환수, 국고금 반납 조치 등 사후관리 철저

8. 보고사항

-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이 제출한 다음의 사항을 전산시스템과 교차 확인 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수산부로 제출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지침 별지 제3호서식] 보고 : 6.28.까지
 -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지침 별지 제5호서식] 보고 : 11.17.까지
 - 보조금 정산 결과 [지침 별지 제6호서식] 보고 : 익년도 1.31.까지

9.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 법령 및 사업 지침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계획을 작성·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어선원 직불제 사업추진 절차 >



※ 신청서, 지급, 예산, 보조금 정산 등 모든 정보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입력·관리·보고

어선원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관련 별표 및 서식

◆ 「직불제법 시행령」 별표

- [별표 1의2] 수산 관계 법령(제13조 관련)
-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4조 관련)
- [별표 2]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제17조제2항 관련)

◆ 「직불제법 시행규칙」 별표

- [별표 2]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

◆ 「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7서식]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8서식]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
-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9서식]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10서식]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
-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

◆ 「어선원 직접지불제 사업지침」 별지 서식

-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어선원 직불금 신청 사전 수요조사표
- [지침 별지 제2호서식] 보안서약서
-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어선원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어선원 직접지불금 이행점검 결과 보고
- [지침 별지 제5호서식] 어선원 직불제 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보고
- [지침 별지 제6호서식] 어선원 직불제 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
-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어선원 직접지불금 사후관리 결과 보고

수산 관계 법령(제13조 관련)

1. 「낙시 관리 및 육성법」
2. 「내수면어업법」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5. 「소금산업진흥법」
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8.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 「수산업법」
10. 「수산업협동조합법」
11. 「수산자원관리법」
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13. 「식물신품종 보호법」
14. 「양식산업발전법」
15. 「어선법」
16. 「어선안전조업법」
17. 「어업자원보호법」
18. 「어장관리법」
1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 「원양산업발전법」
21.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4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 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같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 가.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일일 어획량 또는 양식업의 생산량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할 것
- 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실적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할 것
-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 조치를 준수할 것
- 라.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제17조제2항 관련)

1.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자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 관련 정보의 등록,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에 관한 자료
5.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에 따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관한 자료
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지원된 수산업 관련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9.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폐업 정보를 포함한다)
1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에 관한 자료(같은 조의 위반에 따른 처분자료를 포함한다)
1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 적용 자료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 자료
12. 「수산업법」 제7조·제40조·제48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제11조에 따른 면허·허가·신고에 관한 자료
1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그 자회사가 보유한 사료 등 어업자재 제공에 관한 자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에 관한 자료
1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에 관한 자료
15.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휴어기의 설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에 관한 자료

16.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43조에 따른 면허·허가에 관한 자료와 같은 법 제5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양식장 또는 양식수면의 환경관리를 위한 사료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자료
17.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어선의 등기와 등록에 관한 자료
18.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선 출입항 신고 자료 및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신가입한 어선의 위치통지 자료
1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자에 관한 자료
20. 「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계획,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 환경평가 자료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에 관한 자료
2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및 같은 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선·어구감척사업의 추진에 관한 자료
2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2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신고자료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어업경영 사실에 관한 어업인등의 신고자료와 어업용 면세유의 유종별 공급에 관한 자료
25.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적용 자료
26.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7.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자료
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2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조사·평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자료

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용자의 교정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지급신청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지급제한을 받은 자가 지급신청연도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지급제한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가중할 수 있고,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지급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다. 법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	법 제21조 제1항제3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지 못한 경우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4항		
1)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에 거 주하지 않게 된 경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금 미지급	1년
2) 운영위원회가 어촌마을공동 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 우		1차 경고	
		2차 어촌마을공동기 금 미지급	1년
		3차 어촌마을공동기 금 미지급	3년
마.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 금 미지급	1년
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9조 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해당 양식면적의 친환경 경수산물 생산지원 직 접지불금 미지급	1년
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의무 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별로 1차 위반 시 10 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 반 시 40퍼센트씩 미 지급	
아.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의무 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별로 1차 위반 시 10 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 반 시 40퍼센트씩 미 지급	
자.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의무 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별로 1차 위반 시 10 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 반 시 40퍼센트씩 미 지급	
차. 법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 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6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 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법 제21조 제1항제7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수령한 경우			
<p>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p> <p>1)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p> <p>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p> <p>3)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p>	법 제21조 제1항제8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p>파.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p> <p>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 직접지불금</p> <p>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p>	법 제21조 제1항제9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 <신설 2023. 3. 30.>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6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6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1. 일반현황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②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②-1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②-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 구성원 ※ ②-1에 적지 않은 구성원만 적습니다.

		-			-
		-			-

2. 어선원직접지불금 신청

	근해어업 허가어선[]								연안어업 허가어선[]								구획어업·내수면어업 허가어선 []							
번호	선명	어업 허가 번호	어선 번호	선적항	승선 기간 (승선 일수)	출입항 실적	어선원 재해보 험가입	어선원 임금	선명	어업 허가 번호	어선 번호	선적항	승선 기간 (승선 일수)	출입항 실적	어선원 재해보 험가입	어선원 임금	선명	어업 허가 번호	어선 번호	선적항	승선 기간 (승선 일수)	출입항 실적	어선원 재해보 험가입	어선원 임금
합 계																								

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읽은 후 [] 확인란에 √ 표시합니다.

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 확인
2.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제6항에 따라, 조사, 장부나 서류의 열람 등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관련 서류를 보관·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원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며,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확인
4.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신청인 첨부서류	1. 별지 제12호의7서식에 따른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 승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 4.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5.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 7. 어선등록필증 8. 어선 입항·출항정보 9.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0. 어업면허증 1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2. 임금계좌확인정보 13. 주민등록표 등·초본 1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어선원 및 그 외 가족구성원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은 담당 공무원이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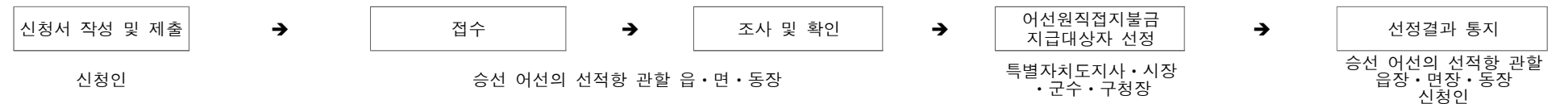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어선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이 신청서에 적힌 어선원 및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수산업협동조합등”이라 합니다)의 수산정책지원, 수산정책안내 서비스, 지방 수산정책 지원, 수산업·어촌 사회 안전망 지원, 수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용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수산업협동조합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수산보조금 정보, 그 밖에 수산정책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에 수산업·어촌 관련 용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선정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선정·점검·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수산업협동조합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어업의 허가·신고, 양식업의 면허·허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어선·어구·시설 거래내역 등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하며,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급 완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어선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작성방법

1. 일반현황: 신청인과 관련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가. ①란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어선원으로 어선원 임금 소득의 주체가 되는 어업인을 말합니다.

나. ②-1란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관계’란에 신청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을 적습니다.

다. ②-2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혀있는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다가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를 분리한 사람으로서 세대 분리 기간(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3년 이내인 어가 구성원의 인적정보를 모두 적습니다.

2. 어선원직접지불금 신청: 담당 공무원은 2쪽에 신청인의 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및 내수면어업 허가가 있는 어선의 승선 사실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의 신청년도의 직전연도 기준 1년간 승선어선 중 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및 내수면어업 허가어선이 있을 경우 []에 √ 표시를 하고, 해당 어업란에 관련 정보를 승선일자 순으로 적습니다.

나. 해당 허가가 있는 어선의 선명, 어업허가번호, 어선번호, 선적항 등을 적습니다.

다. 승선기간은 “00월 00일 ~ 00월 00일” 형식으로 작성하고, 해당 승선기간의 승선일수를 “00일”로 적습니다.

라. 출입항실적은 해당 어선에 승선한 기간의 출입항 신고 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 또는 ×로 표시합니다.

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 또는 ×로 표시합니다.

바. 어선원임금은 해당 승선기간의 선원임금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 또는 ×로 표시합니다.

사. 합계란은 각 어선별 승선일수를 모두 합하여 적습니다.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확 인 요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확 인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승선 사실							
선명	어선번호	톤수	선적항	어업허가	승선기간 월 일 ~ 월 일 ()	어선원재해 보상보험 가입 여부 (○・×)	지급 어선원 임금 (천원)
합계					() 일		(천원)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승선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인)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 · 면장 · 동장
----------------------------	----	--------------

※ 확인자는 아래의 내용을 읽고 [] 확인란에 V 표시합니다.

「수산업·어촌 공익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호에 따라 공익직접
지불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확인

확인자 (인)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

1. 신청인 현황: 총 ○명

2. 지급대상자 명단: 총 ○명

번호	시·군·구	읍·면·동	성명	생년 월일	대표어선 어업 종류	대표어선 선적항	연간 승선일수	관련 서류 확인						
								주민등록 등본	승선사실 확인서	어선 출입항 신고 서류	승선어선 관련 서류	어업 경영체등록	어업외 종합소득 관련 서류	기타

3. 지급제외자 명단: 총 ○명

번호	시·군·구	읍·면·동	성명	생년월일	제외사유

년 월 일

○○ 읍·면·동장 직인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신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입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신청 유형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신청 유형				
제외 사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

구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와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첨부서류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어선원 직불금 신청 사전 수요조사표

[illegible]

* 어선원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어선의 선적항 관할 기준 작성

보안서약서

어선원 직불제의 신청·접수, 변경 등록, 지급 등의 업무를 위하여 어업인, 이·통장, 어촌계장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직무상 정보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보존기간 경과 후 적절한 절차에 따라 파기 또는 소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기관명 :

직 급 :

성 명 : (인)

읍장·면장·동장 (귀하)

※ 직불제 신청 접수, 업무대행, 변경등록, 지급 등을 수행하는 읍·면·동 업무 담당자, 전산보조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내부결재를 받아 1년간 보관

[지침 별지 제3호서식]

20 년도 어선원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엑셀파일로 작성)

(단위 : 명)

시군별	읍면동별	신청결과					선정결과						미선정 사유						
		어업종류별					어업종류별					선정률 (%)	사유별						
		계(a)	연안 어업	근해 어업	구획 어업	내수면 어업	계(b)	연안 어업	근해 어업	구획 어업	내수면 어업		계(c)	승선기간 미충족	소유자· 가족 어선원	어가내 중복신청	소규모 조건불리 직불금수령	타부처 직불금 수령	소득제한 미충족
합계																			
00시	소계																		
	00읍																		
00군	소계																		
	00면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어선원 직접지불금 이행점검 결과 보고(엑셀 파일로 작성)

(OO 시·군·구)

지역		신청자	신청요건 유지 여부						공익기능 수행					점검자	비고
시·도	시·군·구		신청 대상 어선원 자격 여부	선주/가족 어선원 여부	어업외 종합소득 초과 여부	국내 거소 여부	타 직불금 지급 여부	가족 구성원 지급 여부	종합	교육이수 여부	해양쓰레기 수거	폐시설물 회수	그 밖의 공익기능		
강원	울진	홍길동	O/X	O/X	O/X	O/X	O/X	O/X	이행 / 미이행	이수 / 미이수	이행 / 미이행	이행 / 미이행	이행 / 미이행		

[지침 별지 제5호서식] ※ 확정결과 등은 전산에 입력 후 출력하여 보고(전산 서식기준으로 작성)

어선원 직불제 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 천원)

[illegible]

* 보조금 지급예정금액은 행정비를 제외한 어선원 직불금을 말함

[지침 별지 제6호서식] ※ 정산결과 등은 전산에 입력 후 출력하여 보고(전산 서식기준으로 작성)

어선원 직불제 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도)																
1. 어선원 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 어업현황																(단위 : 건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수)	법정리 (수)	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불이행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천원)
				어선원수	계(a)	연안 어업	근해 어업	구획 어업	내수면 어업	어선원수	계(a)	연안 어업	근해 어업	구획 어업	내수면 어업	
합계																
2. 어선원 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시·도	시·군·구	예산액(교부액)				실지급액(집행액)				잔액(반납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3. 어선원 직불제사업 행정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시·도	시·군·구	예산액(교부액)				실집행액(집행액)				잔액(반납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어선원 직접지불금 사후관리 결과보고				
부정행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1. 조사결과 - 부정행위 연도 : - 부정수급 금액 : - 부정행위 내용 :				
2. 처분결과 - 처분일자 : - 환 수 액 : 원(부정수급액 원, 가산금 원) - 등록제한 : 년(년 ~ 년)				
3. 부정행위 확인 경위 				
<p>「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 사후관리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4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color: red; font-size: 1.2em;">○○○ 기관장 (인)</p>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